

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0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11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저출산·고령사회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책의 수립·시행 과정에서 유연한 협업이 필요한바,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의 효과적인 심의 및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, 인용 자치법규명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특정 부서의 장으로 한정된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“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”으로 변경(안 제8조제3항)
나.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 정비(안 제9조제4항)
다. “고령화”를 “인구의 고령화”로 상위법과 같게 정비하여 인구교육의 의미를 명확화(안 제13조)
라.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에 따라 권고안으로 용어 정비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4. 9. 27.~2024. 10. 17.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

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전단 중 “기획조정관, 일자리경제과장, 자치행정과장, 복지정책과장, 여성보육과장, 평생교육과장, 건강증진과장”을 “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본문 중 “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고령화”를 “인구의 고령화”로, “강구하여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여성아동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여성아동과장 김 교 성
	팀장 직위 · 성명	가족지원팀장 김 미 환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지 연 (031-790-5635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조정관, 일자리경제과장, 자치행정과장, 복지정책과장, 여성보육과장, 평생교육과장, 건강증진과장</u> 이 된다. ④ ~ ⑦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9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9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----- ----- -----.
제11조(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) ① (생략)	제11조(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13조(인구교육)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<u>고령화</u>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<u>강구하여야</u> 한다.	제13조(인구교육) ----- ---- <u>인구의 고령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마련하여야</u> -----.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[시행 2024. 4. 24.] [법률 제20112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(업무의 협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·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,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